

“폐기물 반입수수료, 공동사업형태로 지원을”

이경신 전주시의원 시정질문… “리싸이클링타운 등 세곳 주민들에게 가구별 현금 지원 법률에 명시 안돼” 시, “조례개정 이전 형평성 문제로 중단할 수 없는 상황”

전주시의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주민들에게 가구별 현금으로 지원되던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현금 지원이 아닌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리싸이클링타운 등 세 곳의 주민지원협의체의 성상검사를 발미로 한 폐기물 반입저지사태로 인해 전주시에 가끔 쓰레기난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전주시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의원(호자 1·2·3동)은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와 같이 전주시의 폐기물처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의 했다.

이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가구별로 현금을 나누어 지원하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또한 폐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는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현재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주변영향지역은 모두 간접 영향권으로 이들의 지원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 셈이다.



이들 문제로 지적한 후 해당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개선조치를 요구한 바 있고, 2016년 전주시의회 폐기물 특위 결과보고에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간접 영향권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가구별 현금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곳 주민들의 성상검사를 이유로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하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실제, 2013년 환경부에서는 간접영향권지역의 기금 집행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현금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어 이를 문제로 지적한 후 해당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개선조치를 요구한 바 있고, 2016년 전주시의회 폐기물 특위 결과보고에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간접 영향권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가구별 현금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곳 주민들의 성상검사를 이유로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하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 영위를 위해 필수적인데도 힘오 기피시설로 인식돼 입지 선정부터 주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며, “폐기물시설추진법 시행령」제27조에서는 가구별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사업과 규모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는 현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환경부로부터 현금 지급을 지양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이는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금 지급불가 조례 개정’ 후에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이전에 협약 체결 및 형평성 문제로 현금 지급을 해왔던 이들 3개 시설 협의체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주시 조례의 현금지급 불가 규정에 대해서 상위법 일탈소지 여부의 명확한 해석이 요구되어 환경부와 법제처에 질의한 상태로, 향후 회신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충분히 논의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의 성상검사를 이유로 반입저지 시행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해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 확인 등을 하고 있으나 활동 범위는 쓰레기 성상 확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 외로 주민감시요원이 차량 회차 및 반입저지를 하는 등 직접 처분행위로 쓰레기의 반입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폐기물시설 추진법 시행령」 제32조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전주시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 의거 해촉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열린 수사경찰워크숍은 전북 수사경찰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 수사분야 주요정책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도민 중심의 친절서비스 구현을 위한 친절하고 공정한 수사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중요범인 검거유공자로 선발된 완산서 능해량 아드홀에서 수사경찰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 중심의 친절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북 수사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배달앱 등록 음식점 점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라기)가 배달음식 업소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등록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위생적 식품 취급 ▲중상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경미사항은 현장지도하고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전북경찰, 수사경찰 워크숍

도민 중심의 친절서비스 구현을 위한 수사경찰 워크숍이 개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전주시 효자동 한해량 아드홀에서 수사경찰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 중심의 친절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북 수사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수사경찰워크숍은 전북 수사경찰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 수사분야 주요정책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도민 중심의 친절서비스 구현을 통한 친절하고 공정한 수사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중요범인 검거유공자로 선발된 완산서 능해량 아드홀에서 수사경찰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 중심의 친절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북 수사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은 “수사경찰의 역할과 관련하여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전문성을 높여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경찰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주요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 중심의 친절하고 공정한 수사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

김제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 공장서 폭발사고 발생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 공장서 폭발사고로 근로자가 화상을 입었다.

지난 2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 36분경 전북 김제시 백구면 한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 공장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열염에 1도 화상을 입은 A(51)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소방서 추산 18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 가스 저장용기 배관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국가 암 검진으로 암 극복을’

전주시보건소, ‘제12회 암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전주시가 국가 암 검진사업 홍보에 나섰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지난 22일 경기전 앞 광장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제12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일반시민과 주변상인 등을 상대로 암 예방 및 국가 암 검진사업 홍보를 위한 ‘제12회 암 예방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보건소는 이날 캠페인에서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암 예방 수칙과 건강생활 습관 실천, 정기적인 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암 예방과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한,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운동·영양·구강·심뇌·심폐 등 통합 건강검진사업 홍보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센터, 방문보건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에 대한 홍보도 이뤄졌다.

한편,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검진팀(063-281-6356)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지난 22일 전주시 삼천동에 위치한 세내고 부근에서 전주시 주관으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하천 정화 봉사활동을 벌였다. <관련기사 6면>

차이가 큰 공시지가 불균형 문제 해소

전주시, 익산 등 인접 시군과 가격균형 협의 연석회의

전주시가 경계가 인접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차이는 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됐다.

시는 지난 22일 익산시와 김제시, 원주군 등 인접 시·군 지가담당자와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특성조사 및 산정 시 시·군별로 이뤄짐에 따라 행정구역 간 인접 필지에 가격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주요 협의내용은 △행정구역 경계지역 인접 토지 산정지가 비교 및 일단지 여부 검토 △인접 동·리 간 불균형지가 토지 조사 작성 △표준지 선정 변경 및 종합적 검토 등이다.

특히, 완산·덕진구의 경우 행정구역 경계지역 토지 중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하지만 지가 차이가 큰 토지를 대상으로 표준지를 재검토했다. 시는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적정가격 협의 후 지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가격균형 회의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보건소, 결핵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제9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경기전앞 광장 등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결핵 바로 알리기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보건소는 이날 캠페인에서 결핵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2주 이상 기침 하면 결핵검진 △65세 이상 어르신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1년 1회 결핵검진이라는 메시지를 결핵예방 행동수칙과 함께 홍보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결핵치료와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결

핵 신규환자 5명 중 2명은 65세 이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결핵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김경숙 보건소장은 “2주 이상 기침 지속될 경우 결핵을 의심하고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캠페인 행사를 통해 결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올바른 기침예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결핵예방의 날’은 결핵균 발견을 기념하는 ‘세계 결핵의 날’과 같은 3월 24일로, 결핵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됐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